

# 직원에 입맞춤·술 따르기 강요 등 협동조합 내 763건 비위의혹 발각

고용부, 직장 성희롱·임금체불 비정규직·성차별·연장근로 등 법 위반 의혹 짚은 사례 일부 공개

국내 협동조합 내 일부 임직원들의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 비위의혹 다수 가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과 임금체불 214건을 적발했다. 또 비정규직·성차별 7건과 연장근로한 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의혹이 짚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일부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 축협지점 조합장 A씨는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율동 동영상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강요했다. A씨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 외모와 복장에 대한 지적

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나한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며 특정 직원에게 위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직원은 직장 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수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계약기간 이 남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직원을 감시했다.

모 신협지점 임원 B씨의 경우, 회식 도중 술을 깨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 축협지점 C씨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데리고 가 술 따르는 행위 등을 강요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이 이 같은 부당지시 중단을 요구하자 C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 지점 발령을 냈다.

비정규직·성 차별(5건)과 관련해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및 업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임금체불(214건)의 경우, 직원 3955명(해당 지점 합계) 대상 총 38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과소 지급하거나, 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연장근로법정한도 위반(33건)의 경우, 266명(해당 지점 합계)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데 따라 올해 협동조합 전면 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조항 129개 시정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고객에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 중지 전산장애 시 소비자에 손해 전가 등

은행이 인터넷 장애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29개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 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스

수단이 부적절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 용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출 실행일에 변동되는 경우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한다고 돼 있다.

또 모 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바일앱, 휴대폰 메시지 중 1 가지 이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협-포스텍,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다양한 산업 분야 속 AI 혁신 과제와 성과 창출 사례 통한 경영 전략 제시

한국무역협회(KITA)는 포스텍과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무협 무역아카데미 박연우 사무총장, 포스텍 인공지능 연구원 서영주 원장, 교육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 (AI-CORE) ▲AI 기술과 산업 분야의 융합(AI+X)을 주제로 13주간 진행된다. 제조·물류·IoT·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속 AI 혁신 과제와 성과 창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입교식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출 사례를 통한 경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스텍 서영주 인공지능연구원장, 안희갑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L2XXL 연구소장, 윤

정원 아마존웹서비스 대표, 유현경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오퍼레이션 부문장 등 학계 권위자와 산업분야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현대중공업

##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국표원, 국제표준 주도 나서

###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

앞서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등 국제표준 2종 제안해 회원국 관심받아

정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 선박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다.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한다. 앞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80차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다.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 수요 발굴과 보급·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국표원은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앞서 6~7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중국·일본 등 1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 기술분과위원회 총회를 개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비계는 조선 및 해양분야 공사현장에서 지면 내지 임시 받침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비계의 지지력 한계를 넘어 설치돼 붕괴되는 사고가 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중대재해 총 253건 중 떨어짐 사고 가운데 작업발판 및 비계 발생 사고가 가장 많다.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 기준은 방재시험연구원(FILK)이 국표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재해 발생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비계 제작업체인 조광/제강 업체의 신시장 창출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조격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환경부, OECD와 대기오염 저감대책 모색

탄소중립 등 기후목표 기여 수치 제시

환경부가 오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공동 연구협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예정된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객관적 수치(모의 계산·모델링)로 제시된다.

참석기구·기관은 △OECD 환경경제통합국을 비롯해 스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천대학교 등이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대기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대기오염 정량화 연구 진전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난제와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부 주제는 탄소중립 전환이다. 우리 측은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OECD 환경경제통합국이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오염정책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